광주·전남 私교육 대해부

❶ 극심한 양극화

광주 S中 86% 학원수강·과외 전남 H中 15%

광주 도심 지역 중학생과 광주 변두리, 전남 시·군 단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교육 실태 조사'는 사교육이 도·농간 큰 차이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교육 환경이나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심화되고 있는 공교육 격차가 사교육에 있어서도 그대로 재현돼 학생들의 실력 차이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학원 수강료 도시 20만원대 농촌 10만원대

단과학원 수강 광주 도심 62%, 변두리 44%

◇광주지역 도·농간 사교육 차이 극심=광주지역 도심 3개 중학생 329명 가운데 학원 등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광주 S중 86.2% 등 평균 82.1%이다. 이들 중 38.4%인 94명은 종합학원에, 61.6%(151명)은 각각 단과 전문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종합학원 수강생의 학원 수강 시간은 1~2시간 15.4%(14명), 2~3시간 29.7%(27명), 3~4시간 31.9%(29명), 4~5시간 18.7%(17명), 5시간 이상 4.3%(4명). 학원 수강료는 5만~10만원 7.4%(7명), 10만~15만원 8.5%(8명), 15만~20만원 28.8%(27명), 20만~25만원 33%(31명), 25만원 이상 22.3%(21명) 등이었다.

단과 전문학원 수강생의 학원 수강시간은 1~2시간 30.5%(46명), 2~3시간 41%(62명), 3~4시간 21.2%(32명), 4~5시간 6%(9명), 5시간 이상 1.3%(2명). 학원 수강료는 5만~10만원 8%(12명), 10만~15만원 22.5%(34명), 15만~20만원 26.5%(40명), 20만~25만원 24.5%(37명), 25만원 이상 18.5%(28명) 등이었다.

과외를 받는 학생도 43명에 달했다. 이중 비용을 밝힌 28명의 학생의 월 과외비는 10만~20만원 14%(6명), 20만~30만원 41.9%(18명), 30만~40만원 4.6%(2명), 40만~50만원 4.6%(2명) 등이었다.

학습지를 하는 학생은 5.2%(14명)에 불과했다.

이는 광주지역 도심권 중학생들이 종합학원보다는 과목당 수강료가 다소 비싸더라도 자신에게 취약한 과목을 쉽게 보완할 수 있는 유명 단과학원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광주 변두리 D중학교는 조사 대상 78명 중 학원에 다닌다고 응답한 학생 34명 중 55.9%인 19명이 종합학원을, 44.1%인 15명은 단과 전문학원에 다닌다고 밝혀, 학원 수강 비율은 물론 학원 선택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학원 수강료도 차이가 났다. D중학교 학생 중 종합학원 수강생의 경우 학원 수강료는 5만~10만원 5.3%(1명), 10만~15만원 47.4%(9명), 15만~20만원 10.5%(2명), 20만~25만원 10.5%%(2명), 25만원 이상 26.3%(5명) 등으로 15만원 미만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광주 도심지역 중학생 종합학원 수강생의 64%가 15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내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단과 전문학원도 마찬가지여서 학원 수강료는 5만~10만원 6.7%(1명), 10만~15만원 66.6%(10명), 15만~20만원 20%(3명), 25만원 이상 6.7%(1명) 등으로 15만원 미만이 73.3%에 달했다. 광주 도심 중학교의 경우 15만원 이상이 59.5%에 달했다.

또 광주 도심 중학교의 경우 학습지 비중이 5.2%(14명)에 불과한 반면 광주 변두리 중학교는 20.9%(9명)으로 크게 높았다.

◇광주·전남 사교육 차는 더 커=전남 군 단위 H중학생 57명 중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학생은 15.8%(9명)에 불과했다. 사교육 형태 역시 학원에 다닌다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사교육 형태도 학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학습효과가 떨어지는 학습지 77.8%(7명)와 비용이 비싼 과외 22.2%(2명)가 주류를 이뤘다.

역시 전남 군 단위의 J중학교는 조사 대상 85명 중 62.4%인 53명이 학원 73.6%(39명), 학원 및 과외 9.4%(5명), 과외 9.4%(5명), 학습지 7.5%(4명) 등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학원 수강생 44명 중 종합학원 수강생이 77.3%(34명), 단과 전문학원이 22.7%(10명)으로 광주 도심지역 중학생들과는 거의 정반대였다.

전남 시 단위의 J중학교는 105명 가운데 54.3%인 57명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답해 군 단위 J중보다 되레 사교육 비중이 낮았다. 그러나 사교육 형태는 학원 84.2%(48명), 학원 및 과외 7%(4명), 과외 7%(4명), 학습지 1.8%(1명) 등으로 학원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학습지는 적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광주지역 중학생 10명 8명은 학원수강이나 과외 등 사교육을 받는 반면 전남 군 단위의 중학생은 10명 중 2명 미만이 사교육을 받는 등 지역 간 사교육 양극화가 극심하다. 광주지역 한 학원 앞에서 학부모들이 학원을 마친 자녀를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차를 세워놓은 채 기다리고 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학원비 8.3% 올라 10년만에 최고

종합반 입시학원 수강료가 10여년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등 교육물가 상승률이 다시 5%대에 진입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종합반 입시학원 수강료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3% 올랐다.

지난달 종합반 입시학원 수강료 상승률은 1996년 7월의 8.7%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6%의 3.2배에 달한다. 지난달 단과반 입시학원 수강료는 1년 전보다 5.0% 인상돼 2004년 2월의 7.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지난달 미술학원 수강료도 2004년 8월의 4.6% 이후 가장 높은 3.4%의 인상률을 기록했고 고등학교 참고서(7.2%), 중학교 참고서(4.5%), 독서실비(3.8%), 피아노 학원비(3.4%)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 사교육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기타 교육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올라 전월의 상승률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타 교육물가 상승률 4.2%는 2004년 2월 4.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타 교육물가에는 입시학원, 보습학원,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참고서, 가정 학습지, 학습용 오디오.비디오 교재 등 사교육과 밀접한 품목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임명땐 당청관계 위기"

법무장관 이달말께 인선

여당내 불가론 확산 조짐

청와대가 사의를 표명한 천정배 법무장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이 인선 향배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르면 7·26 재·보선 직후인 이달 말께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후임 법무장관 인선 결과에 따라 향후 당청관계가 요동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에서다.

현재 여권 안팎에서는 후임 법무장관으로 임내현 전 법무연수원장, 김성호 국가청렴위원회 사무처장, 정홍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허진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문 전 수석이 임명될 가능성을 우리당 의원들 상당수가 경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후임 인선 = 노심(盧心· 노대통령 의중)'으로 곧바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한 의원은 23일 "문 전 수석을 임명한다면 국민이 보기에 너무나도 명백한 코드인사를 계속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며 "그런 경우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의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문 전 수석이 임명될 경우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정면충돌 직전까지 갔다가 봉합된 당청관계가 다시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는 얘기이다.

특히 5·31 지방선거 직전 문 전 수석이 제기한 '부산정권론' 발언때문에 호남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토 여론이 상당히 확산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부 중진의원들은 청와대에 심상치 않은 당내 분위기를 전달할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고위당직자는 "문 전 수석은 법조인 출신으로서 민정수석을 두차례나 역임했기 때문에 법무장관 자격은 부족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당청관계를 고려한다면 문 전 장관의 임명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최진만기자 man21@kwangju.co.kr

'청와대인데…'에 속지 마세요

5년간 사칭범죄 분석…피해예방법 제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이 지난 5년간 '청와대 사칭사건'을 심층 분석한 결과와 피해사례별 특징 및 '판별법'을 2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청와대가 이날 '"청와대 비선 보좌관인데…"에 속으면 안돼'라는 글을 통해 공개한 이들 범죄의 특징과 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을 살펴본다.

◇청와대 사칭범죄 통계=지난 5년간 발생한 59건의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대통령 내외와 청와대 근무자 등과의 친분 및 친인척 관계를 사칭한 사건이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와대는 "다액피해 사건은 주로 고위직 인사 및 이권 청탁, 청와대 비자금 조성, 지하자금 양성화 등 명목으로 편취한 사례가 대다수"라며 "식사, 접대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100만원, 200만원 단위의 돈을 여러차례 받아 챙기거나 양복을 얻어 입은 사례도 상당수"라고 밝혔다.

범죄 피의자의 전형은 사기 전과(47.3%) 보유자로 무직(57.3%)에 41세~55세(66.4%)의 중년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칭사건 주요 특징=대다수 피해자들이 "당시에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치밀하고 조직적인 전문사기단 범행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의 사기수법을 보면 ▲대통령 등 유력 인사의 '특보'나 '비선 보좌관' 등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민정' '사정' 등 언뜻 힘 있어 보이는 부서 명칭을 주로 사칭하고 ▲휴대폰에 입력한 전화번호가 유력 인사의 번호인 것처럼 속이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청와대 방문 기념품을 나누어 준다는 것.

또 ▲대화 중 휴대폰이 울리면 상대방이 유력인사인 것처럼 호칭을 부르고 ▲청와대 안내실까지 피해자와 동행해 청와대 인사와 특별한 관계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비밀'이라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면 일을 그르치게 된다"라고 강조해 피해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차단하는 수법도 동원한다.

청와대는 "만약 주위에서 청와대를 거론하면서 이권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금품을 요구할 경우에는 청와대 민원전화(02-737-5800)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